

# 정쟁국감, 예산안 심의까지 이어지나... “與野 각성해야” 비판

4개 상임위 제외한 국감 종료  
오는 31일 내년 예산안 공청회 실시  
野 ‘김건희 특별법’ 처리 공세에  
尹, 예산안 시정연설 또 불참 가능성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로 뒤덮였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앞으로 이어질 여야의 예산 심의와 입법 논의의 과정도 여야의 정쟁으로 얼룩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됐다.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11월 7~8일에 종합정책질의회를 한다. 11월 11~12일엔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시스

18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고 합의가 될 경우 다음달 29일에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해마다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다투며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경

우는 많지 않다.

국감 기간 내내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들춰내기에 집중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설지에 대해 “국회 상황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

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무엇이고 묻는 말에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 범위를 더 넓은 ‘김건희 특별법’의 구체적인 처리 일정을 밝히며 공세에 나서는 가운데,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은 무리라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안 대독 가능성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의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을 자아낸다”

며 “국정은 어찌 되던 자리만 지키겠다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국민과 국회에 대한 지독한 무시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3년과 2024년 시정연설은 맹탕이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이제는 그마저도 하지 않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상속세 완화·반도체 산업 지원 등 민생·경제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해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대통령실 “초기 임부 유·사산 휴가, 5일 → 10일로 확대”

저출생 반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회복 돕기 위한 배우자 휴가도 신설  
30일 인구비상대책회의서 발표 예정

대통령실은 27일 초기 임부의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은 내년 1월부터 국제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사진)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반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유·사산 관련 여성 건강 회복 및 난임가정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지원 확대 ▲육아 관련 인식개선 용어 변경 등이다.

유혜미 수석은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으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정책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수석은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사산 휴가를 늘리고 배우자 휴가를 신설하는 것은 입법사항”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10월30일 인구비상대책회의

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유혜미 수석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일·가정 양립 선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제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유 수석은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돼있는데, 이 조치로 인해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임 부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육아 휴직 대신 육아 몰입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 등 저출생 관련 용어 변경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syj@

>> 1면 ‘누가 되든 自國 우선주의...’서 계속

격차 2%p 이하 초박빙  
‘샤이 트럼프’ 변수 될 듯

앵거스리드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18~34세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들 중 약 59%가 해리스를 지지하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다. 또 흑인(67%)과 히스패닉(57%) 유권자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아시아계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대학 학위를 소지한 유권자들 중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같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세 이상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투표 의지가 높다. 백인 유권자들 중 약 5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대학 학위가 없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세를 보인다. 또한 군인 출신 유권자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 민주당, 이번에는 ‘샤이 트럼프’ 넘을 수 있을까... 초박빙에 승패예측 ‘불가’

관건은 지지 성향을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샤이 트럼프’가 판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선을 보면 민주당 후보는 ‘샤이 트럼프’를 넘어야 한다.

미국대선의 주요 경합주는 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노스캐롤라이나·네바다·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7곳이다. 최근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애리조나를 비롯한 4개 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고, 조지아를 비롯해 3개 주에서는 트럼프가 앞서다.

반면 리얼클리어폴리틱스 조사에서는 민주당 강세인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을 포함해 ‘러스트 벨트(오대호 인근 노후 공업지대)’ 지역까지 두 후보 격차는 모두 2% 포인트 이하 박빙이다. 어느 후보가 이길지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셈이다. /서예진 기자

## 청년면접관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은 이견 존중하고 허용”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참여  
“성장 집중투자 성과로 복지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청년 면접관들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차이점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고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에서 이같이 말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 면접관 100명 중 60%가 비당원이었고, 40%만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면접관의 연령은 2030세대가 전체의 87%였다.

한 대표는 사회자가 국민의힘이 다른 정당과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제가 (대통령실 등에) 여러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그것이 가능하다”며 “저에게 반대하는 것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롱 섞인 말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 혹은 주요 핵심 당직자를 상상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거칠게 말해서 회사를 문 닫고 청산해서 나눠 주겠다는 식의 복지”라며 “25만원 주겠다”라고 하고 “5만원 더 주겠다”라는 것

이다. 국민의힘은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성과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정당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둘 다 중시하는 정당”이라며 “2차 세계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뿐”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저는 아직 대한민국이 저희 세대가 겪었던 이상향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AI(인공지능)와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복지를 위해 할 것이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상향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공유사무실에서 열린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시스

히 중요하고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